



유엔글로벌이주협약 소개

유엔글로벌이주협약: 도입배경, 과정 및 목적

2016년 9월 19일 각 국 정부 대표들이 최초로 유엔총회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이주, 난민문제를 논의했다. 이는 국제 어젠다에서 이주, 난민문제가 핵심적 사안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총회에 참석한 193개 유엔 회원국들은 인간의 이동과 관련하여 포괄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선언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을 채택했다.

뉴욕선언문의 부분2는 정부간 협의절차의 개시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초에 정부간 협상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결과 글로벌이주협약의 최종본이 완성되었다.

뉴욕선언문에 명시된 대로 협의, 상황점검, 협상의 세 단계를 거쳐 글로벌이주협약이 작성되었다. 2017년 4-11월에 진행된 협의단계에서 지역, 국가, 세계 차원의 주제별 협의와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협의 단계에 인권, 사회적 포용, 이주의 원인에 대한 대응, 모든 측면의 이주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및 거버넌스, 이주민의 개발에 대한 기여, 인신매매, 비정규 이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여섯 차례의 주제별 세션이 개최되었다.

협의단계에서 수집한 모든 의견을 종합, 분석하기 위한 상황점검단계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1월까지 지속되었다. 상황점검의 결과가 글로벌이주협약의 초안에 반영되어 3단계인 정부간 협상의 토대가 되었다.

2018년 2-7월에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글로벌이주협약에 관한 정부간 협상이 진행되고 그 결과 기술문서와 협약의 최종본이 발표되었다.

글로벌이주협약은 국제이주의 모든 측면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최초의 정부간 협약이다. 입국자, 체류자를 결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주에 관한 국제협력의 의지를 나타내는 구속력이 없는 문서이다. 글로벌이주협약은 안전하고, 질서있는 정규적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유엔회원국들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2030년 지속가능발전어젠다의 목표 10.7에 따라 구성되었다.

글로벌이주협약은 국제이주의 관리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지원하고 각국이 가장 시급한 국제이주관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정책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각국의 이주상황과 수용능력에 따라 이주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뉴욕선언문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이주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국이 “성별, 연령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정규·비정규적 이동에 관한 정보, 이주와 난민의 이동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인신매매, 난민, 이주민, 수용국 사회의 요구사항 등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이주에 관한 공식통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많은 이주민들은 미등록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개인의 출생국이나 시민권취득국가를 인구통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주에 관한 비교가능한 국제데이터는 상대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 글로벌이주협약 이행을 위해서 회원국들이 어떠한 절차를 채택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주 데이터의 수집, 분석, 공유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http://www.iom.int/global-compact-migration>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소식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COVID-19와 노인인권 관련 영상회의 주최

6월 22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은 코로나19 발생 상황에서 노인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주제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각 국 국가인권기구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코로나19상황에서 노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국가인권기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권장사항을 마련했다.

클라우디아 말러(Claudia Mahler) 유엔노인인권독립전문가는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인권의 취약성과 노인들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들, 향후 과제를 소개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노인들은 건강진료, 활동보조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보호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적으로 노인인권 보호 기제가 필요하므로 노인인권 협약의 성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연령차별, 폭력, 학대, 의료 서비스의 제한, 정보격차, 외로움, 경제활동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차원의 협력, 국가인권기구 내에서 노인인권을 우선과제로 책정,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의 강화, 노인인권 관련 국내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페루, 폴란드 나이지리아, 한국의 국가인권기구들이 각각 사례를 발표했다. 페루의 인권옴부즈만 사무소는 4월 국가재난상황에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발간하고 요양시설에서 노인인권기반 대응체계의 구축, 라디오, TV 등을 통한 주요 정보 전달로 노인의 정보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폴란드의 인권옴부즈만 사무소는 노인들을 위한 전화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요양기관과 논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무소의 업무에서 노인인권을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 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정보격차를 느끼고 있으며, 봉쇄정책으로 인해 노인들이 식료품을 구하러 외출하다가 기소되는 경우도 있음을 전했다. 한국 인권위원회는 노인인권 관련 성명서 발표, 유엔에 서한 송부, 유엔 보고서 번역 및 보급 등 노인인권 관련 활동을 소개하고 요양원 등 집단 거주시설에서 대규모 감염, 재가노인의 돌봄 공백, 정보접근 제한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 내에 코로나19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여 노인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출처: COVID-19와 노인인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영상회의 결과보고 (국제인권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소식

코로나19와 청년층: '심각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

8월12일 세계 청년의 날에 맞춰 코로나19가 청년층에 미치는 '체계적이고, 심층적이며 과도한'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연구는 2020년 4월과 5월 유엔 인권사무소가 국제노동기구와 그 밖의 파트너기구들과 협력하여 세계 112개국의 18-29세 청년으로부터 1만2천개의 응답을 받아서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여러 국가에서 실시한 엄격한 격리정책으로 인해 이동의 자유를 비롯한 청년들의 여러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었음이 드러났다.

청년들이 주도했던 작년의 수많은 시위가 감염병으로 중단되었고 온라인으로 자신의 의견표명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인터넷 접속이 모두에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의 부족이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응답자 중 3분의 1은 감염병으로 실직상태에 놓였고 주거권이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문화, 스포츠 활동과 같은 여가활동을 즐길 권리가 다른 어떠한 권리보다 더 크게 제한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는 청년의 교육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70퍼센트가 넘는 응답자는 학교 등 교육시설의 폐쇄로 학업에 지장이 있었다고 말했고, 약 65퍼센트는 감염병 발생 이후 학습량이 줄었다고 답했다.

청년들은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시장이 악화되었음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6명 중 1명은 실직상태에 놓였고 계속해서 일을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평균 23퍼센트 감소했다. 약41퍼센트의 응답자는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학업과 고용이 제한되면서 많은 청년들은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의 악화를 경험한다고 밝혔다. 특히 18-24세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들의 목소리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는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청년들의 인권 보장, 교육 프로그램, 사회보장, 실업급여, 정신건강지원서비스 등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Youth_and_COVID-19.aspx

인권 NGO 소식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 중국의 제재는 홍콩의 민주화운동을 저지하려는 시도

케네스 로스(Kenneth Roth)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은 8월 19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논평을 통해 중국이 자신과 미국의원들, 미국의 인권단체 대표들에게 가한 제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정부는 최근 미국정부가 지속적인 홍콩의 민주화 시위 탄압을 이유로 캐리 램(Carrie Lam) 홍콩 행정장관과 홍콩-중국의 관료들에게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 사무총장은 최근 홍콩 경찰이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출판업자인 지미 라이(Jimmy Lai)를 체포하고 그의 신문사를 급습했으며,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가를 “국가 보안”에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체포한 이후 이번 제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사무총장은 이번 제재가 홍콩의 민주화시위를 왜곡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통치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지만 홍콩의 상황은 그것이 거침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을 표현하고 자유, 법치, 인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사악한 외국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포장하는 것만큼 홍콩의 사례를 무력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해석은 홍콩시민들을 주체성이 결여된 사람들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용감한 민주주의 운동가와 민주화 시위의 힘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이 통제되어 있는 중국 본토의 국민들을 공산당의 주장을 확인할 바가 없다.

로스 사무총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스스로를 강력한 힘과 자신감을 가진 독재자로 비춰지기를 원하지만 거짓에 기반한 독재체제는 불안정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가들의 편에 서게 되어 자랑스럽고 이번 중국 제재가 민주주의 운동가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rw.org/new/2020/08/19/china-desperate-stop-hong-kongs-pro-democracy-movement>

인권위원회와 EU대표부가 9월 17일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공동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의 이행

-일시: 2020년 9월 17일 9-18시

-장소: 웨스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주요 세션구성

세션1: 혐오표현 관련 국제인권규범 및 동향

세션2: 혐오차별 대응 관련 모범적 정책사례와 도전 (평등법 제정 중심)

세션3: 소셜미디어, 인터넷 혐오차별 대응 방안

자세한 내용은 국제인권과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김윤택 02-2125-9886)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김효정 hjkim5@nhrc.go.kr